

자본시장법 개정안(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) 설명자료

1. 지속가능성 공시 법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

- 기후 변화, 에너지 전환, 지정학 리스크, 공급망 이슈 등 환경·사회적 변화가 기업 경영 및 자본시장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글로벌 투자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여부 및 신뢰성을 핵심 투자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, 국내 자본시장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
- ⇒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는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, ESG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,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임

2.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

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체

구분	주요 내용
1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(신설 제159조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• 공시 보고서에는 환경, 사회, 거버넌스 관련 위험, 기회, 전략, 성과 등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• 공시기준(KSSB 기준)은 기후변화, 산업안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이 공시할 항목을 제시함 • 제출 대상, 시기, 공시 기준 및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
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관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의 근거 (신설 제159조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 위반 시 법적책임을 부인하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 •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고, 구체적인 위탁·운영 체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 • 회계기준의 제정 및 위탁 체계와 동일
3 면책 및 시행 시기 (부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행 시기, 적용 대상 및 공시 기준은 기업 규모·업종·공시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 적용 가능 • 제도 초기에는 공시 유예 또는 완화된 적용 가능 • 인센티브 또는 면책 제도 등의 시행 근거 마련 가능

3. 공시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방안

□ 제도의 현실적 도입과 기업 수용성 확보를 위해, 공시 의무 도입과 함께 면책 및 인센티브 체계 병행 필요

① 면책제도 도입 방안

○ (기본안) 제도 시행 후 3년간 민사·형사·행정법상 책임 모두 면책 (면책기간 종료 후 모든 법적책임 부과)

→ 법률 부칙에 면책기간과 면책 대상이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

○ (확장안) 면책기간 종료 후에도 형사책임은 계속 면책

→ 現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 반영, 법률 부칙 명시 외 자본시장법 제444조 등 관련 벌칙 조항에 예외 규정 신설 필요

② 인센티브 방안 제안

구분	주요 내용
(1) 규제 감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시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제재 감경 가능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50조의4 및 별표9와 유사한 기준 적용 검토 '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' 지정제 도입 필요(금융위원장이 기준 마련)
(2) 증권발행분담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시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해 증권 발행 시 부과되는 발행분담금의 50% 감면 방안 검토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필요
(3)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시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우대 가능성 검토 ESG 리스크 반영 등 은행 BIS 산정에 긍정 효과 기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감원 업무해설서 개정 필요
(4)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시 불이행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 강화 등 불이익 부여 가능 산업안전 리스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중대재해 대출 제한 논의와 접목 검토 가능